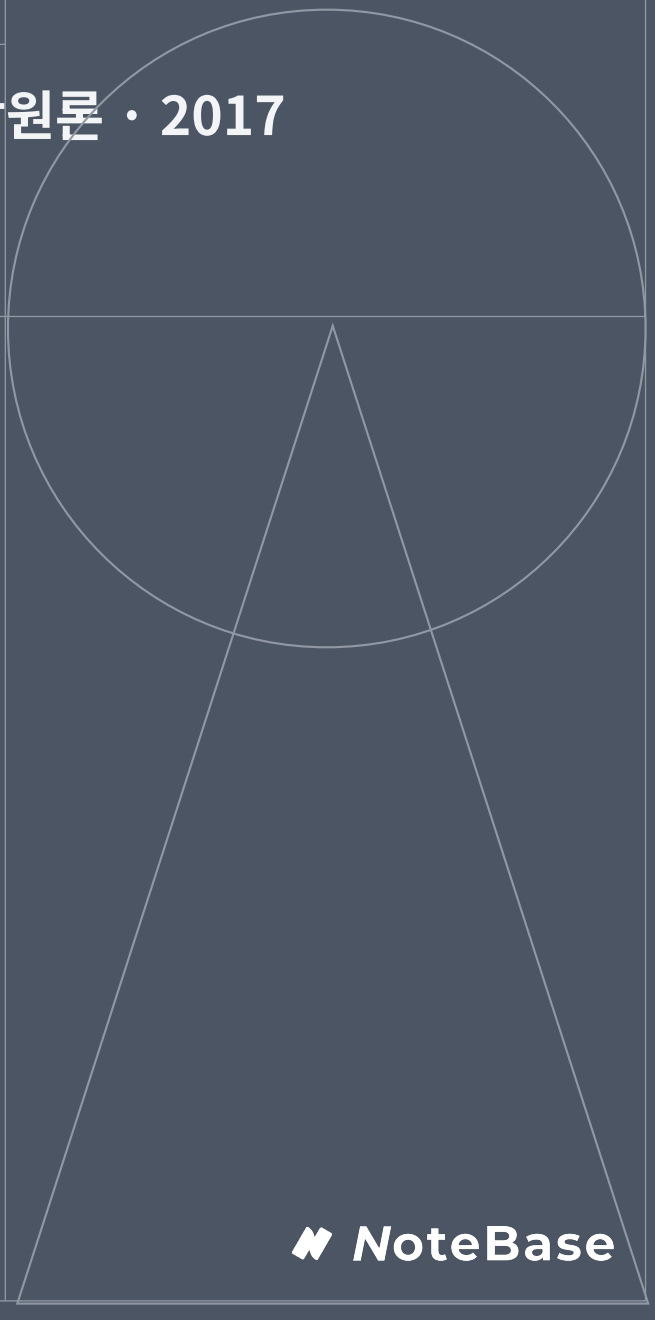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7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7

문 1.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선호체계에 있어서 이행성(transitivity)이 성립한다면,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있다.

②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일 경우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진다.

③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생겼다는 것은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두 재화 중 한 재화가 비재화(bads)일 경우에도 상품조합이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낸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무차별곡선의 기본 성질, 완전대체재의 형태, 원점볼록성과 한계대체율체감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무차별곡선은 소비자에게 같은 효용을 주는 두 재화 조합의 집합이다.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 재화를 많이 가질수록 다른 재화 1단위를 대체하기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즉 한계대체율체감이 나타난다는 뜻이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다.
비재화는 많이 가질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이므로 더 높은 효용이 단순히 원점에서 더 먼 점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있다'이다. 이행성이 성립하면 같은 효용수준을 나타내는 두 무차별곡선이 교차할 수 없다. 교차를 허용하면 한 점을 통해 서로 다른 효용수준이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선호의 일관성이 깨진다. 올바르게는 '이행성이 성립하면 무차별곡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원점에 대해서 오목하게 그려진다'이다. 완전대체재는 두 재화 사이의 대체비율이 일정하므로 무차별곡선이 직선으로 그려진다. 올바르게는 '두 재화가 완전대체재이면 무차별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다'이다.
③ O.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 재화를 더 많이 보유할수록 다른 재화를 대신해 받아들이려는 양이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이는 바로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을 반영한 설명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원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수준'이다. 한 재화가 비재화이면 그 재화의 양이 늘수록 효용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더 좋은 조합은 좋은 재화는 많고 비재화는 적은 방향에 있다. 올바르게는 '한 재화가 비재화이면 더 높은 효용은 원점에서의 거리보다 좋은 재화 증가와 비재화 감소의 방향으로 판단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③을 고르지 못하는 경우는 '원점볼록'을 단순한 곡선 모양 암기로만 외우고 한계대체율체감과 연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②는 완전대체재와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 형태를 뒤섞도록 유도하는 함정이고, ④는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 증가'가 모든 재화에 항상 성립한다고 일반화한 오류를 노린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차별곡선 문제에서는 먼저 교차 가능 여부, 곡선의 형태, 원점볼록성의 의미를 각각 분리해 본다. 원점볼록이면 한계대체율체감, 완전대체재이면 직선, 비재화가 끼면 '원점에서 멀수록 좋다'는 문장을 바로 의심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원점볼록은 한계대체율체감, 완전대체재는 직선, 비재화가 있으면 멀수록 항상 고효용은 아니다.

NoteBase

문 2. 철수는 장롱 안에서 현금 10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A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 인한 본원통화와 협의통화(M1)의 즉각적인 변화는?

① 본원통화는 100만원 증가하고, 협의통화는 100만원 증가한다.

② 본원통화는 100만원 감소하고, 협의통화는 100만원 감소한다.

③ 본원통화는 변화가 없고, 협의통화는 100만원 증가한다.

④ 본원통화와 협의통화 모두 변화가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본원통화와 협의통화(M1)의 구성 항목이 현금의 은행 입금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원통화는 민간이 보유한 현금과 은행의 지급준비의 합이다.
협의통화(M1)는 민간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즉시 결제에 쓸 수 있는 예금의 합이다.
현금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면 민간보유현금은 100만원 줄고 예금은 100만원 늘며, 같은 돈이 은행 안으로 이동할 뿐 새 돈이 생기지 않으므로 두 총량은 즉시 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본원통화는 100만원 증가"와 "협의통화는 100만원 증가"이다.
민간이 들고 있던 현금 100만원이 은행예금으로 바뀌면 본원통화는 민간보유현금 감소와 은행지급준비 증가가 서로 상쇄되어 변하지 않는다. 협의통화도 현금 100만원 감소와 예금 100만원 증가가 상쇄되어 변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본원통화와 협의통화 모두 변화가 없다"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본원통화는 100만원 감소"와 "협의통화는 100만원 감소"이다.
현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유 주체만 민간에서 은행으로 옮겨간 것이다. 본원통화 총량은 유지되고, 협의통화도 현금 감소분만큼 예금이 늘어 총량이 유지된다. 올바르게는 "본원통화와 협의통화 모두 변화가 없다"이다.

③ X: 본원통화는 변화가 없다는 점은 맞지만, 틀린 부분은 "협의통화는 100만원 증가"이다.
협의통화는 민간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의 합이므로 현금이 100만원 줄고 예금이 100만원 늘면 순변화는 0이다. 올바르게는 "협의통화도 변화가 없다"이다.

④ O: 민간이 보유하던 현금이 은행 내부의 지급준비와 예금으로 형태만 바뀐다. 그래서 본원통화도, 협의통화도 총량 기준으로는 즉시 변화가 없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입금이 일어나면 예금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보고 협의통화가 증가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보유현금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든다. 이 문제의 함정은 "새 돈의 창출"과 "기존 현금의 형태 변경"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존 현금을 은행에 넣는 장면이면 먼저 그 돈이 바깥에서 새로 들어온 돈인지, 이미 경제 안에 있던 현금인지부터 본다. 이미 유통 중이던 현금이 예금으로만 바뀌면 본원통화는 현금 감소와 지급준비 증가가 상쇄되고, 협의통화는 현금 감소와 예금 증가가 상쇄되어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기존 현금의 은행 입금은 새 돈의 창출이 아니라 형태 이동이므로 본원통화와 M1의 총량은 그대로이다.

NoteBase

문 3. 효용가능경계(utility possibilities frontie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효용가능경계 위의 점들에서는 사람들의 한계대체율이 동일하며, 이 한계대체율과 한계생산변환율이 일치한다.
ㄴ. 어느 경제에 주어진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되면 이 경제는 효용가능경계 위에 있게 된다.
ㄷ.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에서 생산된 상품의 조합을 사람들 사이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용수준의 조합을 효용가능경계라고 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효용가능경계가 성립하는 조건과 생산가능곡선, 자원 완전고용, 한계대체율, 한계생산변환율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 조합의 경계이다.
효용가능경계는 그렇게 생산된 재화를 개인들 사이에 Pareto 효율적으로 배분했을 때 달성 가능한 효용 조합의 경계이다.
따라서 효용가능경계는 단순한 완전고용만이 아니라 생산의 효율과 배분의 효율이 함께 충족될 때 성립하며, 표준적인 내부해에서는 개인들의 한계대체율이 서로 같고 그 공통값이 한계생산변환율과 일치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ㄱ만 옳고 ㄴ, ㄷ은 틀리므로 조합이 맞다. ㄱ은 효용가능경계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것으로, 효율적인 생산과 배분이 동시에 성립하면 사람들의 한계대체율이 같아지고 그 값이 한계생산변환율과 일치한다.
2번 X: ㄷ이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생산가능곡선상의 한 점에서 생산된 상품의 조합을 … 효용가능경계"라고 본 부분이다. 실제로는 생산가능곡선의 각 효율적 생산점에서 나온 재화를 효율적으로 배분해 얻는 최대 효용조합들의 궤적이 효용가능경계이다.
3번 X: ㄴ이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경제적 자원이 모두 고용되면 이 경제는 효용가능경계 위에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완전고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산출물이 사람들 사이에 Pareto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효용가능경계 위에 놓인다.
4번 X: ㄱ은 옳지만 ㄷ이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은 한 생산점에서의 산출물 배분 결과와 효용가능경계 전체를 혼동한 서술이다.

오답 포인트

완전고용이면 곧바로 효율적이라고 보는 착각과, 생산가능곡선 위의 한 생산점에서 얻는 효용조합 한 점을 효용가능경계 전체와 혼동하는 함정이 출제 포인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생산의 효율과 배분의 효율을 분리해서 본다. 자원 완전고용은 생산가능곡선과 관련된 조건이고, 효용가능경계는 여기에 소비자 간 효율적 배분까지 더해진 개념이다. 또 "한 점"인지 "경계 전체의 궤적"인지 표현을 구분하면 ㄷ 같은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PPF는 생산 조합의 경계이고, UPF는 효율배분된 효용 조합의 경계이다. UPF의 핵심은 표준적 내부해에서 $MRS_A = MRS_B = MRT$이다.

NoteBase

문 4. 내생적 성장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R&D 모형에서 기술진보는 지식의 축적을 의미하며, 지식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고 본다.

② R&D 모형과 솔로우(Solow) 모형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기술진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③ 솔로우(Solow) 모형과 달리 AK 모형에서의 저축률 변화는 균제상태에서 수준효과뿐만 아니라 성장효과도 갖게 된다.

④ AK 모형에서 인적자본은 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솔로우 모형, R&D 모형, AK 모형의 성장 원천과 지식·인적자본의 성격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솔로우 모형은 자본의 한계수확체감 아래 외생적 기술진보가 장기성장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R&D 모형은 지식이나 아이디어의 축적을 통해 기술진보가 내생적으로 발생하는 모형이며, 지식은 비경합적이지만 특허 등으로 어느 정도 배제 가능하다.
AK 모형은 넓은 의미의 자본에 대해 한계수확체감이 사라져 저축률이 장기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R&D 모형에서 기술진보를 지식 축적으로 보는 점은 맞지만, 틀린 부분은 "지식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는 지식은 비경합성은 강하지만 완전한 비배제성으로 보지 않으며, 특허나 독점적 사용권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배제 가능하다.

② O
두 모형 모두 자본에 한계수확체감이 존재한다는 점과 기술진보가 장기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차이는 솔로우 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외생적이고, R&D 모형에서는 기술진보가 연구개발 투자로 내생화된다는 점이다.

③ O
AK 모형에서는 넓은 의미의 자본에 대해 일정한 수익이 유지되므로 저축률 상승이 자본축적 속도를 높여 장기성장률까지 끌어올린다.
따라서 솔로우 모형의 수준효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효과가 나타난다.

④ O
AK 모형에서 인적자본은 개인이 축적하고 사용하는 생산요소로 이해되므로 한 사람이 사용하는 능력과 시간은 동시에 모두가 쓸 수 없다는 점에서 경합적이고,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배제 가능하다.

오답 포인트

R&D 모형의 지식은 비경합적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곧바로 비배제적이라고 연결하면 ①을 맞는 선지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의 조합을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내생성장 모형 문제에서는 먼저 성장 원천이 외생적 기술진보인지, 연구개발·인적자본 축적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대상이 지식인지 인적자본인지에 따라 비경합성·배제가능성 여부를 나누면 정오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R&D의 지식은 비경합적이지만 완전한 비배제적 대상은 아니고, AK는 저축률이 장기성장률에도 영향을 준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 따른 예측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만족 수준 한 단위가 현금 1만원과 동일한 수준의 효용이다.)

김 씨와 이 씨가 한집에 살고 있다. 평상시 두 사람의 만족 수준을 100이라고 하자. 김 씨는 집 안 전체에 음악을 틀고 있으면 만족 수준이 200이 된다. 반면, 이 씨는 음악이 틀어져 있는 공간에서는 만족 수준이 50에 그친다.

①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집 안 전체의 음악 재생여부는 동일하다.

②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이 씨에게 있는 경우 둘 사이에 자금의 이전이 발생한다.

③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김 씨에게 있는 경우 그는 음악을 틀 것이다.

④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한 권리가 이 씨에게 있는 경우 집 안은 고요할 것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코즈 정리에서는 거래비용이 없고 권리가 명확하면 권리의 최초 배분과 무관하게 총잉여가 더 큰 효율적 상태가 선택되고, 권리 배분에 따라 이전지급만 달라진다는 점을 묻는다.

사례 정리

음악이 없을 때 두 사람의 만족수준은 각각 100이므로 총만족은 200이다.
음악이 있을 때 김 씨는 200이 되어 100만큼 이익을 얻고, 이 씨는 50이 되어 50만큼 손해를 본다.
따라서 음악 재생의 순편익은 50이므로 효율적인 결과는 집 안 전체에 음악이 재생되는 상태이다.

핵심 개념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고 재산권이 분명하면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이때 권리의 최초 배분은 최종적인 효율적 결과를 바꾸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는지가 달라질 뿐이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음악 재생으로 김 씨가 얻는 편익 100과 이 씨가 입는 피해 50을 비교한다.
편익이 피해보다 크므로 효율적인 선택은 음악을 트는 것이다.
권리가 김 씨에게 있으면 바로 음악을 틀고, 권리가 이 씨에게 있으면 김 씨가 50 초과 100 미만의 보상을 제시해 음악을 틀도록 협상이 성립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음악 재생의 순편익이 50으로 양수이므로 효율적인 결과는 권리가 누구에게 있든 음악이 재생되는 상태이다. 이 선지는 코즈 정리의 핵심인 효율성 불변을 말하므로 옳다.

② O
권리가 이 씨에게 있으면 기본 상태는 고요함이지만, 김 씨는 음악을 틀 때 100의 이익을 얻고 이 씨는 50의 손해만 본다. 따라서 김 씨가 이 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 둘 다 더 나아질 수 있으므로 자금 이전이 발생한다.

③ O
권리가 김 씨에게 있으면 그는 별도 협상 없이 음악을 틀 수 있다. 또한 음악을 끌 유인이 생기려면 이 씨가 최소 100을 보상해야 하지만 이 씨의 손해는 50에 그치므로 그런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X
이 선지의 틀린 표현은 '권리가 이 씨에게 있는 경우 집 안은 고요할 것이다'이다. 권리가 이 씨에게 있어도 김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음악을 틀 유인이 있으므로 최종 상태는 고요함이 아니라 음악 재생이다. 올바르게는 '권리가 이 씨에게 있어도 협상이 가능하면 집 안 전체에는 음악이 재생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권리의 최초 배분과 최종 자원배분을 혼동하면 ④를 고르게 된다. 코즈 정리에서는 권리 배분이 결과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보상 여부와 소득분배를 바꾼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외부효과 문제는 먼저 행위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순편익을 계산해 효율적 상태를 정한다. 그다음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고 협상 없이 그 상태가 바로 실현되는지, 아니면 보상 지급을 거쳐 실현되는지를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코즈 정리의 핵심은 '효율적 결과는 같고 이전지급만 달라진다'는 점이다.

NoteBase

문 6.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쌀 시장에 가격상한제(price ceiling)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 쌀 농사에 유리한 기후 조건으로 쌀 공급이 소폭 증가했을 때 예상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시장 균형가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격상한선보다 높다.)

① 규제로 인한 자중후생손실(deadweight loss)이 감소한다.

② 시장에서의 거래 가격이 하락한다.

③ 공급자 잉여가 감소한다.

④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구속적인 가격상한제 아래에서 공급이 증가할 때 거래량과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례 정리

정부가 쌀 시장에 가격상한제를 두고 있다.
시장 균형가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가격상한선보다 높아서 가격상한제는 계속 구속적이다.
유리한 기후로 공급곡선이 소폭 우측 이동한다.

핵심 개념

구속적인 가격상한제는 시장가격을 상한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하므로 실제 거래가격은 상한선에 머문다.
이때 거래량은 수요량이 아니라 상한가격에서의 공급량으로 결정된다.
공급이 증가하면 같은 상한가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 거래량이 증가하고 shortage와 자중후생손실이 줄어든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가격상한제가 계속 구속적인지와 공급 증가가 상한가격에서의 공급량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본다.
균형가격이 여전히 상한선보다 높으므로 거래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상한선에 고정된다.
따라서 판단의 핵심은 거래량 증가, shortage 축소, 후생손실 축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가격상한제가 구속적이면 거래량은 상한가격에서의 공급량으로 정해진다. 공급이 우측 이동하면 같은 상한가격에서 공급량이 늘어나 거래량이 증가하므로 규제로 인해 사라졌던 거래 일부가 회복된다. 따라서 자중후생손실은 감소한다.
2번: X.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은 이미 가격상한선에 묶여 있다. 균형가격이 여전히 상한선보다 높으므로 공급이 늘어도 거래가격은 더 하락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거래 가격이 하락한다'이고, 올바르게는 '거래가격은 가격상한선에 머문다'이다.
3번: X. 유리한 기후는 생산비를 낮춰 공급곡선을 우측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같은 상한가격에서 더 많은 양을 팔 수 있고 단위당 비용도 낮아지므로 공급자 잉여가 반드시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선지는 '공급자 잉여가 감소한다'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공급 증가로 공급자 잉여는 커질 수 있다'이다.
4번: X. 가격상한선은 그대로 낮게 유지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 더 많은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감소보다 증가 방향으로 보는 것이 맞다. 틀린 표현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이고, 올바르게는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가격상한제가 있어도 공급이 늘면 가격이 자동으로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2번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균형가격이 여전히 상한선보다 높다는 조건 때문에 가격은 움직이지 않고 거래량만 늘어난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격규제 문제는 먼저 규제가 구속적인지부터 본다. 그다음 규제가 유지된 상태에서 수요나 공급이 움직이면 거래가격이 아니라 상한가격 또는 하한가격에서의 거래량과 shortage 또는 surplus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구속적 가격상한제에서 공급 증가가 오면 가격은 고정되고 거래량은 늘며 자중후생손실은 줄어든다.

NoteBase

문 7. 케인즈(J. M. Keynes)의 단순 국민소득 결정모형(소득-지출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계저축성향이 클수록 투자의 승수효과는 작아진다.

②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이 존재하면 일반적으로 실업이 유발된다.

③ 임의의 국민소득 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치지 못할 때, 그 국민소득 수준에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한다고 한다.

④ 정부지출 증가액과 조세감면액이 동일하다면 정부지출 증가가 조세감면보다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케인즈의 소득-지출모형에서 승수, 디플레이션 갭,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승수는 자율지출이 1단위 늘어날 때 국민소득이 몇 배로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디플레이션 갭은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달하는 상태이다.
정부지출승수는 조세승수의 절댓값보다 크므로 같은 금액이면 정부지출 변화가 국민소득에 더 큰 영향을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한계저축성향이 커지면 승수는 $k = 1/MPS$로 더 작아진다. 따라서 투자 증가가 국민소득을 늘리는 파급효과도 작아진다.

② O
디플레이션 갭은 완전고용 수준에 비해 총수요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어 일반적으로 실업이 유발된다.

③ X
틀린 부분은 "임의의 국민소득 수준에서"이다. 어떤 소득수준에서든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작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모두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디플레이션 갭은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서 총수요가 총공급에 미달하는 경우를 뜻한다.

④ O
정부지출승수는 $1/(1 - MPC)$, 조세승수의 절댓값은 $MPC/(1 - MPC)$이다. 증가액과 감면액이 같다면 정부지출 증가가 조세감면보다 국민소득을 더 크게 늘린다.

오답 포인트

③은 "총수요가 총공급보다 작다"는 일반적 불균형과 "완전고용소득에서의 수요 부족"인 디플레이션 갭을 일부러 섞어 놓은 선지이다. 디플레이션 갭은 반드시 완전고용국민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갭 문제는 먼저 기준 소득수준이 완전고용국민소득인지 확인하면 된다. 승수 문제는 정부지출승수와 조세승수의 크기 비교, 그리고 MPS가 커질수록 승수가 작아진다는 점을 함께 대입하면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디플레이션 갭은 완전고용 기준의 수요 부족이고, 승수는 MPS와 반비례하며, 같은 금액이면 정부지출 효과가 조세감면 효과보다 크다.

NoteBase

문 8. A국, B국은 X재와 Y재만을 생산하고, 생산가능곡선은 각각 $X = 2 - 0.2Y$, $X = 2 - 0.05Y$이다. A국과 B국이 X재와 Y재의 거래에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X재의 가격은?

① Y재 4개

② Y재 11개

③ Y재 21개

④ 거래가 불가능하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각국의 생산가능곡선에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을 구한 뒤, 그 사이에 들어가는 교역가격을 찾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A국의 생산가능곡선이 $X = 2 - 0.2Y$, B국의 생산가능곡선이 $X = 2 - 0.05Y$라는 점이다.
구해야 할 값은 두 나라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X재 1단위의 가격을 Y재 개수로 표시한 값이다.
주의할 조건은 교역가격이 A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보다 커야 하고, B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보다 작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용할 공식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생산가능곡선에서 X를 1 늘릴 때 포기해야 하는 Y의 양이다.
$X = 2 - aY$ 형태이면 X를 1 늘리기 위해 필요한 Y 감소량은 $1/a$이므로, X재 1단위의 기회비용은 $1/a$개의 Y재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문제에서 각국의 기술조건이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로 주어졌고, 교역 가능 여부가 바로 상대가격과 기회비용 비교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A국은 $X = 2 - 0.2Y$이므로 $0.2Y = 2 - X$, $Y = 10 - 5X$이다. 따라서 X재 1단위를 더 생산할 때 Y재 5개를 포기하므로 A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Y재 5개이다.
2. B국은 $X = 2 - 0.05Y$이므로 $0.05Y = 2 - X$, $Y = 40 - 20X$이다. 따라서 X재 1단위를 더 생산할 때 Y재 20개를 포기하므로 B국의 X재 1단위 기회비용은 Y재 20개이다.
3. 서로 이익이 되는 교역이 성립하려면 X재의 국제가격이 Y재 5개보다 크고 Y재 20개보다 작아야 한다. 즉 합의 가능한 가격 범위는 Y재 5개 초과 20개 미만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이다. 'Y재 4개'가 X재 1단위의 가격이면 A국의 기회비용 5보다 낮다. A국은 국내에서 X재 1개를 만들 때 Y재 5개를 포기하는데 교역으로는 4개만 받으므로 X재를 수출할 유인이 없다. 틀린 표현은 'Y재 4개'이며, 올바르게는 Y재 5개보다 커야 한다.
2번: O이다. 'Y재 11개'는 A국의 기회비용 5보다 크고 B국의 기회비용 20보다 작다. 따라서 A국은 X재를 수출하고 B국은 X재를 수입하는 거래에 모두 동의할 수 있다.
3번: X이다. 'Y재 21개'가 X재 1단위의 가격이면 B국의 기회비용 20보다 높다. B국은 국내에서 X재 1개를 만들 때 Y재 20개만 포기하면 되는데 교역으로는 21개를 내야 하므로 수입할 이유가 없다. 틀린 표현은 'Y재 21개'이며, 올바르게는 Y재 20개보다 작아야 한다.
4번: X이다. 거래는 불가능하지 않다. X재의 가격이 Y재 5개 초과 20개 미만이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틀린 표현은 '거래가 불가능하다'이며, 올바르게는 '거래 가능한 가격 구간이 존재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를 그대로 가격으로 읽으면 틀리기 쉽다. $X = 2 - 0.2Y$에서 0.2를 바로 기회비용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며, 실제로는 식을 Y 기준으로 바꾸거나 X 1단위 증가에 대응하는 Y 감소량을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 문제에서 상대가격을 묻으면 먼저 각국의 해당 재화 1단위 기회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다음 수출국이 받아들일 최소가격과 수입국이 받아들일 최대가격 사이에 선지가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상호 이익이 되는 교역가격은 두 나라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된다.

NoteBase

문 9. 다음은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고정환율제도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과 ㉡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 자본 유입이 발생한다.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외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의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고정환율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변할 수는 없다. 결국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화를 (㉡)해야 한다.

① ㉠: 확대, ㉡: 매입

② ㉠: 확대, ㉡: 매각

③ ㉠: 축소, ㉡: 매입

④ ㉠: 축소, ㉡: 매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고정환율제하의 재정정책이 자본이동과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 상승은 해외 자본 유입을 부르고 외환시장에서 외화 공급을 증가시켜 환율 하락 압력을 만든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이 환율 하락을 막아야 하므로 외화를 매입하고 자국 통화를 공급한다.

핵심 개념

재정지출 확대는 IS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이자율을 올리고 자본유입을 유발한다.
고정환율제에서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기면 중앙은행은 외화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늘림으로써 고정환율을 유지한다.

적용 기준

판단 순서는 재정정책 방향 확인 → 이자율 변화 확인 → 자본 유출입 방향 확인 → 환율 압력 확인 → 중앙은행의 외화 매입·매각 결정이다.
이 문항에서는 이자율 상승과 자본 유입이 보이므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이를 막기 위한 중앙은행의 행동은 외화 매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O.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자본이 유입되어 환율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외화를 매입해야 하므로 ㄱ은 확대, ㄴ은 매입이 맞다.
2번: X. ㄱ의 확대는 맞지만 ㄴ의 매각이 틀리다. 환율 하락 압력은 외화 공급 증가에서 오므로 중앙은행은 외화를 시장에 더 내놓는 매각이 아니라 외화를 사들이는 매입을 해야 한다.
3번: X. ㄴ의 매입은 환율 하락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ㄱ의 축소가 틀리다. 재정지출 축소라면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본 유출이 발생하여 환율 상승 압력이 나타난다. 이 선지는 '축소'를 '확대'로 고쳐야 전체 연결이 성립한다.
4번: X. 재정지출 축소와 외화 매각의 조합은 환율 상승 압력 상황의 설명이다. 이 문항은 이자율 상승과 자본 유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축소'와 '매각'이 아니라 '확대'와 '매입'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자본 유입이 생기면 외화 공급이 늘어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연결을 놓치면 매입과 매각을 거꾸로 고르기 쉽다. 또한 재정지출 확대와 축소에 따른 이자율 방향을 반대로 기억하면 3번이나 4번으로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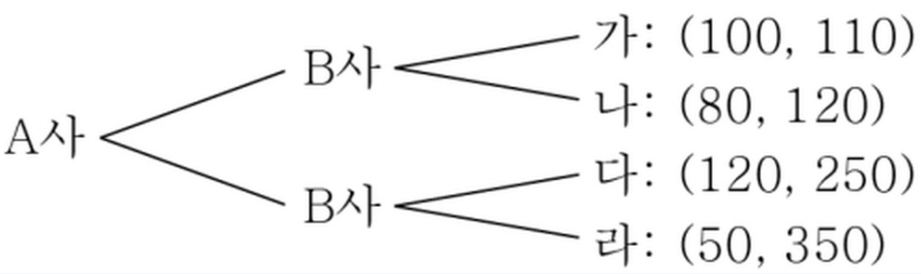
고정환율제 문항은 먼저 정책이 이자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본다. 그다음 자본 유출입 방향을 확인하고, 자본 유입이면 환율 하락 압력이라 외화 매입, 자본 유출이면 환율 상승 압력이라 외화 매각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정환율제에서 자본 유입은 환율 하락 압력과 외화 매입, 자본 유출은 환율 상승 압력과 외화 매각으로 이어진다.

NoteBase

문 10. 아래의 그림은 기업 A와 B의 의사결정에 따른 이윤을 나타낸다. 두 기업은 모든 선택에 대한 이윤을 사전에 알고 있다. A사가 먼저 선택하고, B사가 A사의 결정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 두 회사 간의 신빙성 있는 약속이 없을 때 각 기업이 얻게 되는 이윤의 조합은? (단, 괄호 안은 A사가 얻는 이윤, B사가 얻는 이윤을 나타낸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순차게임의 의사결정나무에서 B사의 최적 반응을 먼저 찾고, 이를 예상한 A사의 선택을 후진유도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선지별 해설

1번 가: X. 위쪽 분기에서 B사는 자신의 이윤이 110인 가와 120인 나 중 나를 택한다. 따라서 A가 위쪽을 골라도 최종 결과는 가가 아니라 나이다.
2번 나: O. B사는 위쪽 분기에서는 나를, 아래쪽 분기에서는 다보다 라를 택한다. 이를 예상한 A사는 자신의 이윤이 80인 위쪽 결과 나와 50인 아래쪽 결과 라를 비교해 나가 되는 위쪽 분기를 선택한다.
3번 다: X. 아래쪽 분기에서 B사는 자신의 이윤이 250인 다보다 350인 라를 택한다. 따라서 다는 최종 결과가 될 수 없고, 올바르게는 아래쪽 분기의 최종 결과가 라이다.
4번 라: X. 아래쪽 분기까지 가면 라가 되지만, A사는 그 경우 자신의 이윤이 50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안다. 올바르게는 A사가 위쪽 분기를 선택하므로 최종 결과는 라가 아니라 나이다.

오답 포인트

각 끝점의 A사 이윤만 보고 다를 고르거나, 전체 이윤 합이 큰 라를 고르면 틀린다. 이 문제는 각 단계에서 선택권을 가진 기업이 자기 이윤을 최대화한다는 점을 순서대로 적용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사결정나무는 마지막 선택자부터 거꾸로 본다. 먼저 각 B사 노드에서 두 번째 수가 큰 가지를 고른 뒤, 그 결과만 남겨 놓고 A사가 첫 번째 수가 큰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순차게임은 후진유도이다. 마지막 선택자의 최적 반응을 먼저 확정한 뒤 처음 선택자의 이익으로 최종 선택을 정한다.

NoteBase

문 11.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규모 개방경제가 있다. 정부재정이 균형예산이고 상품수지(무역수지)가 균형일 때 a값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구매, NX는 순수출, T는 조세이다.)

- Y=C+I+G+NX
- C=250+0.75(Y-T), T=aY, I=750, Y=5,000

① 0.1

② 0.2

③ 0.3

④ 0.4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균형예산 $G = T$과 무역수지 균형 $NX = 0$을 동시에 대입해 비례세율 a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Y = 5{,}000$, $I = 750$, $C = 250 + 0.75(Y - T)$, $T = aY$이다.
정부재정이 균형예산이므로 $G = T$이다.
상품수지가 균형이므로 $NX = 0$이다.
구해야 할 값은 비례세율 a이다.

사용할 공식

국민소득 항등식은 $Y = C + I + G + NX$이다.
이 문제는 균형예산과 무역수지 균형을 함께 주었으므로 $G = T = aY$, $NX = 0$을 바로 대입해 총수요가 $Y = 5{,}000$과 같아지도록 맞추면 된다.

계산 과정

소비는 $C = 250 + 0.75(Y - T) = 250 + 0.75(5{,}000 - 5{,}000a) = 4{,}000 - 3{,}750a$이다.
균형예산이므로 $G = T = aY = 5{,}000a$이다.
이를 $Y = C + I + G + NX$에 대입하면 $5{,}000 = (4{,}000 - 3{,}750a) + 750 + 5{,}000a + 0$이다.
정리하면 $5{,}000 = 4{,}750 + 1{,}250a$, 따라서 $250 = 1{,}250a$이다.
결국 $a = 0.2$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a = 0.1$이면 $T = G = 500$, $C = 250 + 0.75 \times 4{,}500 = 3{,}625$이므로 $C + I + G = 4{,}875$이다. 총수요가 국민소득 5,000에 125만큼 못 미쳐 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0.1에서 균형"이고, 올바르게는 "0.2에서 균형"이다.
2번 O: $a = 0.2$이면 $T = G = 1{,}000$, $C = 250 + 0.75 \times 4{,}000 = 3{,}250$이다. 따라서 $C + I + G = 3{,}250 + 750 + 1{,}000 = 5{,}000$이므로 국민소득과 정확히 일치한다.
3번 X: $a = 0.3$이면 $T = G = 1{,}500$, $C = 250 + 0.75 \times 3{,}500 = 2{,}875$이므로 $C + I + G = 5{,}125$이다. 총수요가 125만큼 초과해 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0.3에서 균형"이고, 올바르게는 "0.2에서 균형"이다.
4번 X: $a = 0.4$이면 $T = G = 2{,}000$, $C = 250 + 0.75 \times 3{,}000 = 2{,}500$이므로 $C + I + G = 5{,}250$이다. 총수요가 250만큼 초과해 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0.4에서 균형"이고, 올바르게는 "0.2에서 균형"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세금이 늘면 소비만 줄어든다고 보고 $G = T$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를 빼먹는 데 있다. 여기서는 한계소비성향이 0.75이므로 세금 1 증가로 소비는 0.75만 줄고 정부구매는 1 늘어 총수요는 오히려 0.25 증가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규모 개방경제 문제에서 균형예산과 무역수지 균형이 함께 나오면 먼저 $NX = 0$, $G = T$를 국민소득 항등식에 넣는다. 그다음 소비함수에 세금을 반영해 C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총수요가 주어진 Y와 같아지도록 미지수를 푼다.

암기 포인트

균형예산에서는 G 증가 효과와 세금의 소비감소 효과를 함께 본다. 이 문항에서는 $NX = 0$, $G = T = aY$를 먼저 넣으면 $a = 0.2$가 바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2.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조업을 중단하더라도 남아 있는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는 고정비용이지만 매몰비용은 아니다.

②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 모양일 때, 한계비용은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을 통과하지 않는다.

③ 한계수확체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은 감소한다.

④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평균총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이 모두 U자 모양일 때,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은 평균총비용의 최저점보다 더 낮은 생산량 수준에서 발생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매몰비용과 고정비용의 구별,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관계, 한계생산과 한계비용의 역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정비용: 생산량이 변해도 단기에는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매몰비용: 이미 지출되었거나 계약상 피할 수 없어 현재 의사결정으로 회수·절감할 수 없는 비용이다.
한계비용: 산출 1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늘어나는 비용이다. 한계비용은 한계생산과 반대로 움직인다.
평균총비용과 평균가변비용: 평균총비용은 평균가변비용에 평균고정비용을 더한 값이므로, 평균고정비용이 양(+)이면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보다 오른쪽에 놓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는 생산량과 무관한 고정비용이다. 또한 조업을 중단해도 피할 수 없는 지출이므로 현재 조업 여부를 결정할 때는 매몰비용으로 취급된다.
틀린 부분은 "매몰비용은 아니다"이다.
올바르게는 "고정비용이면서 매몰비용이다"이다.

② X
평균총비용곡선이 U자형이면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에서 그 곡선을 통과한다. 한계비용이 평균보다 낮으면 평균을 끌어내리고, 높으면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틀린 부분은 "최저점을 통과하지 않는다"이다.
올바르게는 "최저점을 통과한다"이다.

③ X
한계수확체감이 발생하면 추가 산출 1단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가변요소가 필요해진다. 따라서 한계생산이 하락하고 한계비용은 상승한다.
틀린 부분은 "한계비용은 감소한다"이다.
올바르게는 "한계비용은 증가한다"이다.

④ O
평균총비용은 평균가변비용에 평균고정비용을 더한 값이다. 평균고정비용은 생산량이 늘수록 계속 하락하므로,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보다 더 높은 생산량 수준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이 평균총비용의 최저점보다 더 낮은 생산량 수준에서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고정비용과 매몰비용을 서로 배타적인 개념처럼 보는 착각이 자주 나온다. 또한 U자형 평균비용곡선에서는 한계비용이 최저점을 지나간다는 기본 관계를 놓치기 쉽고, 한계수확체감이면 생산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한계비용이 오른다는 점을 반대로 외우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용 문제는 먼저 피할 수 있는 비용인지와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인지를 구분한다. 그다음 한계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을 지난다는 관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한계수확체감이 보이면 한계생산 하락, 한계비용 상승으로 바로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피할 수 없으면 매몰비용으로 보고, 체감생산이면 한계비용이 오르며, 한계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총비용의 최저점을 지난다.

NoteBase

문 13. 2020년도에 어떤 나라의 밀 생산 농부들은 밀을 생산하여 그 중 반을 소비자에게 1,000억원에 팔고, 나머지 반을 1,000억원에 제분회사에 팔았다. 제분회사는 밀가루를 만들어 그 중 절반을 800억원에 소비자에게 팔고 나머지를 제빵회사에 800억원에 팔았다. 제빵회사는 빵을 만들어 3,200억원에 소비자에게 모두 팔았다. 이 나라의 2020년도 GDP는? (단, 이 경제에서는 밀, 밀가루, 빵만을 생산한다.)

① 1,600억원

② 2,000억원

③ 3,200억원

④ 5,000억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GDP를 구할 때 중간재를 중복 계산하지 않고 최종재의 시장가치만 합산하거나 부가가치만 합산하는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밀 생산 농부의 총판매액: 2,000억 원이다.
- 이 중 소비자에게 직접 팔린 밀 1,000억 원은 최종재이다.
- 제분회사가 만든 밀가루 중 소비자에게 팔린 800억 원은 최종재이고, 제빵회사에 판 800억 원은 중간재이다.
- 제빵회사가 소비자에게 판 빵 3,200억 원은 최종재이다.
- 이 경제는 밀, 밀가루, 빵만 생산하므로 이들 최종재의 가치 합이나 각 단계의 부가가치 합으로 GDP를 구할 수 있다.

사용할 공식

GDP는 최종재의 시장가치 합과 같다.
GDP=Σ 최종재 가치
또는
GDP=Σ 부가가치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기업 간 거래된 중간재를 모두 더하면 같은 생산물이 여러 번 계산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소비자에게 직접 팔린 최종재를 찾으면 밀 1,000억 원, 밀가루 800억 원, 빵 3,200억 원이다.
2. 이를 합하면 $1,000 + 800 + 3,200 = 5,000$억 원이다.
3. 부가가치로 확인하면 농부 2,000억 원, 제분회사 $1,600 - 1,000 = 600$억 원, 제빵회사 $3,200 - 800 = 2,400$억 원이므로 합계는 $2,000 + 600 + 2,400 = 5,000$억 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1,600억 원은 제분회사의 밀가루 총판매액일 뿐 전체 경제의 GDP가 아니다. 이 값에는 제빵회사에 넘어간 800억 원의 중간재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팔린 밀과 빵의 가치도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GDP가 5,000억 원이다.

② X
2,000억 원은 밀 생산 농부의 총판매액이다. 한 생산단계의 산출액만으로 전체 경제의 GDP를 나타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최종재 전체 또는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합한 5,000억 원이 GDP이다.

③ X
3,200억 원은 제빵회사가 소비자에게 판 빵의 가치만 반영한 값이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직접 팔린 밀 1,000억 원과 밀가루 800억 원도 최종재이므로 함께 포함해야 한다. 올바르게는 GDP가 5,000억 원이다.

④ O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된 밀 1,000억 원, 밀가루 800억 원, 빵 3,200억 원을 합하면 5,000억 원이다. 중간재인 기업 간 거래분은 제외하므로 이 값이 GDP이다.

오답 포인트

빵 3,200억 원만 보고 최종재를 하나만 세거나, 반대로 농부 판매액 2,000억 원과 제분회사 판매액 1,600억 원을 그대로 더해 중간재를 중복 계산하는 실수가 자주 나온다. 이 문항의 함정은 소비자에게 직접 팔린 밀과 밀가루도 최종재라는 점을 놓치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GDP 계산 문제는 먼저 각 거래가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재인지 기업의 가공용 구매인 중간재인지 구분한다. 그다음 최종재 판매액만 합하거나 각 단계의 부가가치를 더해 같은 값이 나오는지 검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GDP는 최종재 합 또는 부가가치 합이며, 기업 간 중간재 거래는 중복 계산이므로 제외된다.

NoteBase

문 14. 형과 동생이 한집에 살고 있다. 형은 매일 5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동생은 현재 소득이 없다. 형은 소득 5만원의 일부를 떼어 매일 동생의 용돈으로 나누어 주고자 한다. 각 소비금액에 대한 형과 동생의 효용은 아래 표와 같다고 가정한다. 형이 소득의 분배에 있어서 단순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한다고 할 때, 매일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금액은?

소비금액	0만원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형의 효용	0	60	70	80	90	100
동생의 효용	0	10	20	30	50	70

① 1만원

② 2만원

③ 3만원

④ 4만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단순 공리주의는 분배 이후 두 사람의 총효용이 가장 커지는 배분을 고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형의 총소득은 5만원이고 동생의 초기소득은 0원이다.
형이 동생에게 x만원을 주면 형의 소비는 $5-x$만원, 동생의 소비는 x만원이 된다.
판단 기준은 형의 효용과 동생의 효용을 더한 총효용의 크기이다.

사용할 공식

총효용은 U_형(5-x)+U_동생(x)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단순 공리주의가 개인별 효용의 합이 최대가 되는 분배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분배로 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1만원을 주면 형 소비는 4만원, 동생 소비는 1만원이므로 총효용은 $90+10=100$이다.
2. 2만원을 주면 형 소비는 3만원, 동생 소비는 2만원이므로 총효용은 $80+20=100$이다.
3. 3만원을 주면 형 소비는 2만원, 동생 소비는 3만원이므로 총효용은 $70+30=100$이다.
4. 4만원을 주면 형 소비는 1만원, 동생 소비는 4만원이므로 총효용은 $60+50=110$이다.
5. 네 선택지 중 총효용이 가장 큰 경우는 4만원을 나누어 주는 경우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7

선지별 해설

① X
1만원을 주면 총효용이 100이다. 4만원을 줄 때의 총효용 110보다 작다. 틀린 표현은 '1만원이 최적 분배'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4만원을 줄 때 총효용이 최대'이다.

② X
2만원을 주면 총효용이 100이다. ①과 같고 ④보다 작다. 틀린 표현은 '2만원이 최적 분배'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4만원을 줄 때 총효용이 최대'이다.

③ X
3만원을 주면 총효용이 100이다. 형의 한계효용 감소만 보고 중간 분배를 고르면 틀리기 쉽지만, 실제 총효용은 ④보다 작다. 틀린 표현은 '3만원이 최적 분배'라는 판단이며, 올바르게는 '4만원을 줄 때 총효용이 최대'이다.

④ O
4만원을 주면 형의 효용은 60, 동생의 효용은 50이 되어 총효용이 110이다. 네 선택지 중 가장 큰 값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형의 효용 감소만 보거나 동생의 효용 증가만 따로 보면 1만원부터 3만원까지가 비슷해 보여 헷갈릴 수 있다. 이 문제는 각 배분안마다 두 사람의 효용을 반드시 합산해야 하며, 4만원 배분에서만 총효용이 110으로 더 커진다는 점이 함정의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단순 공리주의 문제는 각 분배안마다 분배 이후 소비수준을 먼저 적고, 그에 대응하는 개인별 효용을 표에서 찾은 뒤, 총효용을 합산해 가장 큰 값을 고르면 된다.

암기 포인트

단순 공리주의는 평등 자체가 아니라 총효용의 최대화를 기준으로 분배를 판단한다.

NoteBase

문 15. A국의 명목이자율이 6%이고 B국의 명목이자율이 4%라고 하자. 양국의 실질이자율이 동일하고 구매력평가설이 적용된다고 할 때, 피셔방정식을 이용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높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②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높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③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낮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④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낮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피셔방정식으로 기대인플레이션 차이를 구하고, 구매력평가설로 그 차이가 환율과 통화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셔방정식은 명목이자율이 실질이자율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관계이다. 즉 $i \approx r + \pi^e$이다.
구매력평가설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나라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 문항에서는 양국의 실질이자율이 같으므로 명목이자율이 더 높은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높고, 그만큼 A국 통화는 B국 통화에 비해 절하될 것으로 본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제학원론 · 2017

선지별 해설

① O
A국 명목이자율이 6%, B국 명목이자율이 4%이고 실질이자율이 같으므로 피셔방정식에 따라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보다 2%p 높다.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나라의 통화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므로 A국 통화가치는 B국 통화에 비해 2% 떨어질 것으로 본다.

② X
틀린 부분은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올라갈 것"이라는 표현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이 2%p 더 높다면 A국 통화는 절상되는 것이 아니라 절하된다. 올바르게는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보다 2%p 더 높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낮고"라는 표현이다.
실질이자율이 같은데 명목이자율이 A국에서 더 높으므로 기대인플레이션은 A국이 더 높아야 한다. 올바르게는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보다 2%p 더 높고, 그 결과 A국 통화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의 기대인플레이션보다 2%p 더 낮고"라는 표현이다.
통화가치 하락 방향 자체는 높은 인플레이션 국가의 통화가 절하된다는 점에서는 맞는 방향이지만, 전제인 기대인플레이션 비교가 거꾸로 되어 있어 선지 전체는 틀리다. 올바르게는 "A국의 기대인플레이션이 B국보다 2%p 더 높고, A국의 통화가치는 B국의 통화에 비해 2%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다.

오답 포인트

명목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통화가치도 함께 높아진다고 기계적으로 연결하면 ②에 끌리기 쉽다. 이 문항은 명목이자율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실질이자율이 같을 때 그 차이가 기대인플레이션 차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명목이자율 차이 = 기대인플레이션 차이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기대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나라의 통화가치는 구매력평가설상 상대적으로 하락한다고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실질이 같으면 명목이 높은 나라가 기대인플레이션도 높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그 나라 통화는 절하된다.

NoteBase

문 16. 어느 기업의 자본의 한계생산물(MP_K)이 $50 - 0.1K$라고 하자. 자본재 가격은 단위당 10,000원, 감가상각률은 5%로 일정하며, 생산물 가격은 단위당 200원으로 일정하다. 실질 이자율이 초기 10%에서 5%로 하락하였을 때, 이 기업의 초기 자본량(K_0)과 바람직한 투자수준(I)은? (단, K는 자본량이다.)

① $K_0 = 375,\ I = 25$

② $K_0 = 375,\ I = 50$

③ $K_0 = 425,\ I = 25$

④ $K_0 = 425,\ I = 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본의 한계생산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같게 놓아 초기 최적 자본량과 금리 하락 후 원하는 투자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자본의 한계생산물 $MP_K = 50 - 0.1K$, 생산물 가격 200원, 자본재 가격 10,000원, 감가상각률 5%이다.
초기 실질이자율은 10%이고 하락 후 실질이자율은 5%이다.
구해야 할 값은 초기 자본량 K_0와 금리 하락 후 바람직한 투자수준 I이다.

사용할 공식

최적 자본량은 자본의 한계생산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
$P \times MP_K = p_K(r + \delta)$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기업이 자본을 한 단위 더 사용할 때 얻는 추가수입과 그 자본을 보유하는 추가비용이 같아질 때 이윤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자본의 한계생산가치는 $200(50 - 0.1K) = 10000 - 20K$이다.
2. 초기에는 $r = 0.10, \delta = 0.05$이므로 사용자비용은 $10000(0.10 + 0.05) = 1500$이다.
3. $10000 - 20K = 1500$에서 $20K = 8500$, 따라서 $K_0 = 425$이다.
4. 금리 하락 후에는 $r = 0.05$이므로 사용자비용은 $10000(0.05 + 0.05) = 1000$이다.
5. $10000 - 20K = 1000$에서 새로운 바람직한 자본량은 $K_1 = 450$이다.
6. 바람직한 투자수준은 자본 증가분이므로 $I = K_1 - K_0 = 450 - 425 = 2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1번: X. $I = 25$는 맞지만 초기 자본량이 틀렸다. 초기에는 $10000 - 20K = 1500$이므로 $K_0 = 425$가 되어야 한다. 틀린 표현은 $K_0 = 375$이고, 올바르게는 $K_0 = 425$이다.
2번: X. 초기 자본량과 투자수준이 모두 틀렸다. 초기 자본량은 425여야 하고, 금리 하락 후 원하는 자본량은 450이므로 투자는 25이다. 틀린 표현은 $K_0 = 375, I = 50$이고, 올바르게는 $K_0 = 425, I = 25$이다.
3번: O. 초기 사용자비용이 1500이므로 $K_0 = 425$이고, 금리 하락 후 원하는 자본량이 450이므로 투자수준은 25이다.
4번: X. 초기 자본량 425는 맞지만 투자수준이 틀렸다. 금리 하락 후 자본량은 450이므로 증가는 25이다. 틀린 표현은 $I = 50$이고, 올바르게는 $I = 25$이다.

오답 포인트

투자 I를 새 목표 자본량 450으로 보지 않고 자본 증가분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또 사용자비용을 $r + \delta$가 아니라 r만으로 계산하면 초기 자본량을 잘못 구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본수요 문제는 먼저 $P \times MP_K$를 만들고, 다음에 사용자비용 $p_K(r + \delta)$를 계산한 뒤 두 값을 같게 놓아 자본량을 구한다. 금리 변화 뒤 투자량을 묻으면 새 자본량에서 기존 자본량을 뺀 증가분인지부터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최적 자본은 한계생산가치와 사용자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정해지고, 투자량은 보통 원하는 자본의 증가분으로 읽는다.

NoteBase

문 17. 실업과 인플레이션 및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총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상충관계를 가져온다.

②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합리적 기대하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도 단기적으로 실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시킬 수 없다.

③ 프리드만(M. Friedman)과 펠프스(E. Phelps)의 기대가 부가된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은 적응적 기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④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재정확대 정책은 필립스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가 부가된 필립스 곡선에서 공급충격, 기대형성 방식, 총수요정책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대가 부가된 필립스 곡선은 예상 인플레이션이 주어질 때 실업률과 실제 인플레이션의 단기 관계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적응적 기대는 과거의 실제 인플레이션을 바탕으로 예상 인플레이션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합리적 기대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반영하여 정책효과까지 미리 예상하는 방식이다.
총수요 확대는 보통 주어진 단기 필립스 곡선 위의 이동을 만들고, 총공급 충격은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부분은 "상충관계"이다. 공급측 충격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기존 상충관계를 약화시키고, 불리한 공급충격이면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함께 상승하는 양(+)의 관계를 만든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공급충격은 필립스 곡선을 이동시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확장적 통화정책도 … 하락시킬 수 없다"이다. 합리적 기대하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통화확대는 단기적으로 실제 실업률을 자연실업률보다 낮출 수 있다. 효과가 없는 것은 예상된 정책효과이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예상하지 못한 확장정책은 단기적으로만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아래로 낮출 수 있다.
③ O: 프리드먼과 펠프스의 기대가 부가된 필립스 곡선은 예상 인플레이션이 과거 경험을 따라 서서히 조정된다는 적응적 기대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④ X: 틀린 부분은 "필립스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이다. 재정확대는 총수요를 늘려 같은 단기 필립스 곡선상에서 더 높은 인플레이션과 더 낮은 실업률 쪽으로 경제를 이동시킨다. 틀린 표현 → 올바르게는 재정확대는 필립스 곡선의 이동이 아니라 곡선상의 이동을 만든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공급충격과 총수요충격을 뒤섞으면 쉽게 속는다. 공급충격은 곡선 이동이고, 총수요 확대는 곡선상 이동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②는 합리적 기대를 "모든 통화정책이 무효"로 과장하면 틀리기 쉽다. ④는 재정정책이 실업과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이동과 이동 경로를 구분하지 않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필립스 곡선 문제는 먼저 충격이 총수요인지 총공급인지 구분한다. 총수요 충격이면 단기 필립스 곡선상의 이동으로 보고, 총공급 충격이면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본다. 기대형성 문구가 프리드먼·펠프스와 연결되면 적응적 기대를 우선 떠올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프리드먼·펠프스는 적응적 기대, 새고전학파의 정책무력성은 합리적 기대, 공급충격은 필립스 곡선 이동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A국은 자동차 수입을 금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은 2억원이고 판매량은 40만대에 불과하다. 어느 날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동차 시장을 전격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개방 이후 자동차 가격은 국제시세인 1억원으로 하락하였고, 국내 시장에서의 자동차 판매량도 60만대로 증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원점을 지난다.)

①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의 2배 이상이다.

②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크다.

③ 국내 소비자 잉여는 예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④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장 개방 전후의 가격·수량으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복원한 뒤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사회적 잉여의 변화를 면적으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개방 전 가격 2억원, 거래량 40만대, 개방 후 가격 1억원, 국내 판매량 60만대이다.
공급곡선은 원점을 지나므로 공급은 $Q_s = 20P$로 잡을 수 있다.
개방 전 균형점 $(Q, P) = (40, 2)$, 개방 후 수요점 $(60, 1)$를 지나므로 수요는 $P = 4 - 0.05Q$이다.
가격 단위가 억원, 수량 단위가 만대이므로 잉여 면적 1은 1조원에 해당한다.

사용할 공식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가격선과 수요·공급곡선 사이의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한다.
이 문제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모두 직선이고 공급곡선은 원점을 지난다고 주어졌으므로, 개방 전후 잉여 변화를 삼각형 넓이 비교로 바로 구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개방 전 소비자 잉여는 $\frac{1}{2} \times (4 - 2) \times 40 = 40$조원이다.
2. 개방 전 생산자 잉여는 $\frac{1}{2} \times 2 \times 40 = 40$조원이다.
3. 개방 후 소비자 잉여는 $\frac{1}{2} \times (4 - 1) \times 60 = 90$조원이다.
4. 개방 후 국내 생산은 $Q_s = 20$이므로 생산자 잉여는 $\frac{1}{2} \times 1 \times 20 = 10$조원이다.
5. 따라서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50조원,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30조원,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20조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은 50조원이고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30조원이므로, 증가분이 감소분의 2배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2배 이상"이고, 올바르게는 "생산자 잉여 감소분보다 크지만 2배 이상은 아니다"이다.
② X: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20조원이고 국내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30조원이므로 더 크지 않다. 틀린 표현은 "크다"이고, 올바르게는 "30조원보다 작은 20조원이다"이다.
③ O: 개방 전 소비자 잉여는 40조원, 개방 후 소비자 잉여는 90조원이므로 개방 후 소비자 잉여는 이전의 2배를 넘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옳다.
④ X: 국내 사회적 잉여 증가분은 20조원이고 국내 소비자 잉여 증가분의 절반은 25조원이므로 절반 이상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절반 이상"이고, 올바르게는 "절반보다 작다"이다.

오답 포인트

개방 후 60만대를 전부 국내 생산량으로 착각하면 생산자 잉여를 과대평가하게 된다. 이 문항은 시장 개방 후 가격은 국제가격으로 고정되고, 국내 판매량 60만대와 국내 생산량 20만대를 구분해야 풀린다. 또 "2배 이상 증가"를 증가분 비교로 읽지 말고 개방 후 수준이 개방 전의 2배 이상인지로 읽어야 정답과 맞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역 개방 잉여 문제는 먼저 개방 전 자급자족 균형점과 개방 후 국제가격, 국내 소비량, 국내 생산량을 분리한다. 그다음 수요·공급의 절편을 잡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각각 삼각형 면적으로 계산하면 선지의 크기 비교를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개방되면 소비자 잉여는 크게 늘고 생산자 잉여는 줄며, 사회적 잉여 증가는 두 변화의 차이로 계산된다.

NoteBase

문 19. X재의 생산자는 A와 B, 두 기업밖에 없다고 하자. X재의 시장수요함수는 $Q = 32 - 0.5P$이고, 한계비용은 24로 일정하다. A와 B가 공모해서 독점 기업처럼 이윤극대화를 하고 생산량을 똑같이 나누기로 한다면, 기업 A가 얻는 이윤은? (단, 고정비용은 0이다.)

① 20

② 64

③ 88

④ 1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공동독점이 총이윤을 극대화할 때의 총생산량과 가격을 구한 뒤, 이를 반씩 나누었을 때 기업 A의 이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 주어진 값: 시장수요함수는 $Q = 32 - 0.5P$, 한계비용은 24이다.
- 구해야 할 값: 공동독점 아래에서 생산량을 반씩 나눌 때 기업 A의 이윤이다.
- 주의할 조건: A와 B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기업처럼 총이윤을 극대화한 뒤 생산량만 똑같이 나눈다.

사용할 공식

역수요함수와 한계수입을 구해 $MR = MC$를 적용한다.

$P = 64 - 2Q$

$TR = P \times Q = (64 - 2Q)Q = 64Q - 2Q^2$

$MR = \frac{dTR}{dQ} = 64 - 4Q$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두 기업이 공모하여 독점기업처럼 행동하므로, 시장 전체 기준으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는 공동독점 산출량을 먼저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수요함수 $Q = 32 - 0.5P$를 역수요함수로 바꾸면 $P = 64 - 2Q$이다.
2. 총수입은 $TR = (64 - 2Q)Q = 64Q - 2Q^2$, 한계수입은 $MR = 64 - 4Q$이다.
3. 공동독점 조건 $MR = MC$를 적용하면 $64 - 4Q = 24$이므로 $Q = 10$이다.
4. 가격은 $P = 64 - 2 \times 10 = 44$이다.
5. 총이윤은 $(P - MC)Q = (44 - 24) \times 10 = 200$이다.
6. 생산량을 똑같이 나누므로 각 기업은 $Q_A = Q_B = 5$를 생산하고, 이윤도 반씩 나누어 기업 A의 이윤은 $200/2 = 1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20은 $P - MC = 44 - 24$에서 나온 단위당 이윤일 뿐 기업 A의 총이윤이 아니다. 틀린 판단은 '기업 A의 이윤이 20이다'이고, 올바르게는 '기업 A의 이윤은 총이윤 200의 절반인 100이다'이다.
② X: 64는 수요곡선의 가격절편에서 나온 숫자일 뿐 공동독점하의 기업 A 이윤과는 무관하다. 틀린 판단은 '기업 A의 이윤이 64이다'이고, 올바르게는 '공동독점 가격 44와 총산출량 10을 이용해 계산한 기업 A의 이윤은 100이다'이다.
③ X: 88은 공동독점 가격 44를 일부만 잘못 적용해 만든 오답값일 뿐이다. 틀린 판단은 '기업 A의 이윤이 88이다'이고, 올바르게는 '기업 A의 매출은 $44 \times 5 = 220$, 비용은 $24 \times 5 = 120$이므로 이윤은 100이다'이다.
④ O: 공동독점 총이윤은 200이고 이를 두 기업이 똑같이 나누므로 기업 A의 이윤은 100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두 기업이 존재한다는 말에 끌려 쿠르노처럼 각자 의사결정한다고 보거나, 단위당 이윤 $P - MC = 20$을 곧바로 기업 A의 총이윤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공모해서 독점기업처럼 이윤극대화'라는 문구가 보이면 먼저 시장 전체 총이윤을 구한 뒤 배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담합·공동독점 문항은 먼저 시장 전체를 하나의 독점기업으로 보고 $MR = MC$로 총산출량과 가격을 구한다. 그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방식대로 생산량이나 이윤을 기업별로 배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동독점은 먼저 전체 독점해를 구하고, 나중에 기업별 몫을 나눈다.

NoteBase

문 20. 갑작스러운 국제 유가 상승으로 A국에서 총생산이 줄어들고 물가가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발생하였다. <보기>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나눈 대화이다. 본 대화에 대한 논평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중앙은행 총재: “무엇보다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이자율을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 재무부 장관: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① 이자율을 높이는 정책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다 높일 수 있다.

② 재정확대 정책은 자연산출량(natural rate of output)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③ 재정확대 정책을 실시할 경우 현재보다 물가 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④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긴축통화정책과 확장재정정책이 각각 총수요, 물가, 산출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자연산출량이 무엇으로 결정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태그플레이션은 총공급 감소로 생산은 줄고 물가는 오르는 상태이다.
긴축통화정책은 총수요를 줄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지만 산출과 고용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
확장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경기침체를 완화할 수 있지만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다.
자연산출량은 노동, 자본, 기술, 제도 같은 공급측 요인으로 결정되므로 일반적인 총수요 확대정책만으로는 커지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이자율 인상은 투자와 소비를 줄여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생산과 고용을 더 줄여 실업률을 높일 수 있다.

② X
틀린 부분은 "재정확대 정책은 자연산출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표현이다.
확장재정정책은 총수요를 늘려 실제 산출량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자연산출량 자체를 높이지는 못한다. 올바르게는 "재정확대 정책은 경기침체를 완화하는 단기 총수요 관리정책이다"라고 고쳐야 한다.

③ O
부정적 공급충격으로 이미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면 총수요가 증가하여 생산 감소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물가 수준은 현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④ O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침체가 자동으로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공급충격의 충격이 지속되거나 조정이 느리면 침체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는 타당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산출량을 늘린다"와 "자연산출량을 늘린다"를 의도적으로 섞어 놓은 함정이다. 확장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실제 GDP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자연산출량까지 높인다고 착각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태그플레이션 문제에서는 먼저 원인이 총수요 충격이 아니라 총공급 감소인지 확인한다. 그다음 긴축통화는 물가 안정 대신 경기 악화를 감수하는 정책인지, 확장재정은 경기 부양 대신 추가 물가상승을 감수하는 정책인지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산출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급측 요인인지 총수요 관리정책인지부터 가른다.

암기 포인트

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충격, 긴축은 물가안정, 재정확대는 경기완화, 자연산출량은 공급측 결정이다.

NoteBase